

제329회 국회 (정기회)

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

---

# 업 무 현 황

---

2014. 10. 14.



**방송통신위원회**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# 목 차

I. 일반현황	1
II. 추진과제	4
1.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	4
2.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	9
3.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이용자 보호	13
III. 주요 현안과제	19
IV. 참고자료	21

# I. 일반현황

## 1. 주요 업무

### □ 소관사무 (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)

- 지상파방송 정책, 방송광고 정책, 편성평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
- 조사기획 총괄, 방송통신 시장조사,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익 증진,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에 관한 사항
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
  - 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'방송통신심의위원회' (민간독립기관)가 수행

### □ 주요기능

- 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책
-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·제재
-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·시행
-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·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
- 방송광고·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·시행
-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 등

## 2 조직 · 인원 및 부서기능

□ 조직도 ('14. 10 현재) : 1실 3국 16과



□ 인원 ('14. 10 현재)

총 계	정무직	일반직	별정직
217명	5명	207명	5명

□ 부서별 기능

<b>기획조정실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 및 예산 (기금 포함)의 종합·조정, 조직·정원</li> <li>대국회 업무, 법무·규제 개혁, 공영방송 임원 추천·임명</li> <li>재무 관리, 부내 정보화, 정책 홍보 및 취재활동 지원</li> <li>외국정부·국제기구 등과의 교류·협력</li> </ul>
<b>방송정책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상파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책</li> <li>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(재)허가 및 관련 법령 제·개정 시 사전동의</li> <li>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·산정</li> <li>방송용 주파수 관리,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·제재, 방송분쟁 조정</li> </ul>
<b>이용자정책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</li> <li>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·제재, 통신 분쟁 재정·알선</li> <li>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·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</li> <li>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</li> </ul>
<b>방송기반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원 및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</li> <li>방송광고의 편성·운용, 방송광고 균형 발전</li> <li>방송 프로그램 운용·편성, 방송평가 제도 운영</li> </ul>
<b>운영지원과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인사, 교육훈련, 상훈 및 징계</li> <li>연금, 급여 및 복리후생</li> <li>행정정보 공개 및 산하단체 감사</li> </ul>

### 3 예산 및 기금

□ 세출예산 규모 : ('13년) 2,036억원 → ('14년) 1,963억원(73억원 감)

- (재원별) 일반회계 507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456억원
- (기능별) 인건비 146억원, 기본경비 41억원, 주요사업비 1,776억원

### 4 소관법률 및 주요 유관기관 현황

□ 소관법률

분 야	법 률 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</li> <li>• 방송법</li> <li>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</li> <li>• 방송문화진흥회법</li> <li>•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</li> <li>•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</li> <li>• 방송통신발전기본법 (일부)</li> <li>• 전파법 (일부)</li> </ul>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</li> <li>•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</li> <li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</li> <li>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</li> </ul>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 관 명	대표자	주 요 기 능	근 거 법 률
한국방송공사 (KBS)	조대현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의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신용섭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문환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곽성문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
## Ⅱ. 추진과제

### 1.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

#### 1-1.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

##### □ 개요

- 방송의 공적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재원 안정화 등을 추진

##### □ 추진 실적

- (재허가) 방송의 공익성 관련항목을 중점 심사하는 등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(5월) 현장점검을 실시(9월)  
※ 재허가 대상 : EBS, 도로교통공단, 공동체라디오 등 12개 사업자, 20개 방송국
- (공익 채널) 방송분야의 공익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 선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(9월) 신청서를 접수(~9.30)  
※ 공익채널은 사회복지, 과학문화 진흥,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, 각 분야별 3개 이내 채널을 매년 선정하며 '15년도 공익채널은 총 15개 채널이 신청함
- (지배구조 개선) 공영방송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('13.4.17~11.28) 등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방송법 등 개정(5.28)  
※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, KBS, EBS, 방문진 이사 등 결격사유 강화
- (수신료 현실화) 공영방송이 광고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주 재원인 수신료 인상 추진  
- 「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」 국회 제출(3.4)

##### □ 향후 계획

-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(10~11월) 및 위원회 의결(11월)
- 공익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·심사 및 위원회 의결(10~11월)
-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 대한 국회 심의 적극 지원(10월~)

## 1-2. 종편PP 재승인조건 이행 점검

### □ 개 요

- '14. 3. 19. 방통위에서 재승인을 의결한 종편PP 3사(TV조선, JTBC, 채널A)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 점검

### □ 추진 실적

- (재승인조건 부과) 종편PP 3사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상회하였고 심사 사항별 과락이 없어 재승인 하되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건 등 부과('14.3.19. 위원회 의결)

#### < 주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>

구분	종편PP(TV조선·JTBC·채널A)
재승인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부 사전·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·운영 등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매반기 운영실적을 제출할 것(공통)</li> <li>○ 사업계획서상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을 준수할 것(공통)</li> </ul>
권고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출 것(TV조선)</li> <li>○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(JTBC)</li> <li>○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할 것(채널A)</li> </ul>

- (재승인조건 이행 점검)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실적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콘텐츠 투자실적, 재방비율 및 보도비율 등의 이행실적을 연도별로 점검

- '14. 9~10월 현재 '14년도 상반기 이행실적을 점검 중에 있음

### □ 향후 계획

- '14년도 이행실적 점검 : '15. 2~3월

## 1-3. 미디어 다양성 증진

### □ 개 요

- 방송의 여론다양성 증진과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시청점유율 조사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

### □ 추진 실적

- (시청점유율 조사) '13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을 조사·산정하여 발표\*하였으며(7월), '14년도 시청점유율에 대한 조사 진행 중(1월~ )

\* 방송법(제69조의2)을 위반하여 시청점유율 30%를 초과한 사업자는 없음

-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「시청점유율조사 개선 연구반」 운영(3월~ )

- (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)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을 통한 시청행태의 증가를 반영하여 고정형TV 외에 스마트폰, PC 등을 통한 TV시청 시간(비실시간 포함)을 조사하는 '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' 실시(9월)

- (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) '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(5월), 평가를 위한 방송시장 획정방안\* 마련(9월)

\* 유료방송, 채널거래, 프로그램거래, 방송광고 시장으로 획정

### □ 향후 계획

- 고정형 TV의 시청점유율 조사 완료(12월)
- N스크린 시청기록 조사(9~12월)
- '14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실시(12월) 및 평가결과 국회보고 ('15.3월)



## 1-4. 지역방송 발전 지원 강화

### □ 개 요

- 광고시장 변화 등으로 인해 수입기반이 약화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“지역방송발전 지원 특별법”이 제정('14. 6)됨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

### □ 추진 실적

- (법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)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제정
  - 지역방송에 대한 ‘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기준’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‘지역방송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’ 제정
- (지역방송 지원예산 확보)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 추진
  - ※ '15년 예산 추진(안) : 프로그램 제작지원 및 유통 활성화 등 총 43억('14년 예산 20억원)
- (지역방송 지원계획 수립) 매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 수립·시행
- (지역방송발전위원회 확대) 특별법 제정으로 확대(5명→9명)된 위원 선임
  - ※ 현행 : 방통위 위원 2인, 단체추천 3인 → 변경 : 국회추천 2인, 단체추천 2인 추가(총9인)

### □ 향후 계획

-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 : '14. 11월
-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 : '14. 12월
- 제1차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수립·시행 : '15. 상반기

## 1-5.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

### □ 개 요

- 방송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조사·제재하여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시장질서 확립

### □ 추진 실적

- (불공정행위 점검·시정) 7개 SO의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·지연지급 관련 방송법령 위반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(7월)
- (재산상황 공표) 방송사의 '13년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 공표(6월)

#### < 재산상황 공표대상 >

구 분	지상파	지상파DMB	종합유선	방송채널	위성방송	계
사업자수	53개	18개	92개	200개	1개	364개

- (유료방송 약관개선) 유료방송 이용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이용약관상 미비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보완·개선토록 권고(1월, 미래부와 공동 추진)

※ 상품구성과 요금정보의 구체화, 결합서비스 정보제공 강화, 위약금 면제 요건·기준의 명확화 및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의 신설 등

### □ 향후 계획

- 방송사업자 불공정행위 점검 및 조사(연중)
- 방송광고시장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추진(11월~12월)

## 2.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지원

### 2-1.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추진 (MMS, UHD 등)

#### □ 개 요

- 방송기술 발전에 맞춰 다양하고 질 높은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상파 다채널방송(MMS)과 UHD 방송 등 차세대 방송서비스 도입 추진

\* MMS(Multi-Mode Service) : 1개 HD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하여 여러 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

\* UHD(Ultra High-Definition) : 현 HD 방송보다 4~16배 선명한 차세대 방송

#### □ 추진 실적

- MMS 정책 추진방향, 법·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반 구성·운영('13.9월~)
  - 지상파 4사(KBS, MBC, SBS, EBS) MMS 실험방송 실시(수도권, '14.1월~4월)
- 방통위·미래부 공동으로 차관급 '지상파 UHD방송 정책협의회'('14.8월~) 구성·운영
  - 지상파 3사(KBS, MBC, SBS) UHD 실험방송 실시(수도권, '14.3월~12월)

#### □ 향후 계획

- 시청자 복지 증진, 기술적 여건 및 방송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 다채널방송(MMS) 정책방안 마련('14. 12월)
- 주파수 확보 및 콘텐츠 수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 UHD방송 정책방안 마련(미래부 협의)

## 2-2. 방송광고 규제 완화 및 시장 활성화

### □ 개 요

-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한류 원동력인 방송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, 방송광고 전문 인력 양성·혁신형 중소기업\* 방송광고 지원 등 방송광고 진흥 기반을 조성

\* 혁신형 중소기업은 ▲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한 벤처·이노비즈·메인비즈기업, 우수 녹색경영·녹색인증 중소기업, ▲서울시에서 선정한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, ▲특허청에서 선정한 IP(지식재산) 스타기업 등을 말함

### □ 추진 실적

- (방송광고 규제 완화)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(1월~9월) 및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향 발표('14.8월, 3기 정책과제)

- 광고총량제 개선 및 간접광고·협찬고지 규제 완화 등

※ '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규제개선 TF' 구성('14.10월)

- (방송광고 진흥 기반 조성) 방송광고 온·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광고전문 인력양성,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확대

- 방송광고 전문교육 실시('14.9월 기준 방송광고기획 등 65개 과정, 7,100여명)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지원('14년 3.5억원)

-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 지원을 위해 송출비 할인('14.9월 현재 137개사 선정, 670억원) 및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추진('15년도 신규사업, 20억원)

### □ 향후 계획

- 방송광고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(안) 마련 : '14. 12월
-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방안 마련 : '15. 2월

## 2-3. 방송콘텐츠 제작·유통 지원

### □ 개 요

- 외주제작 생태계 조성,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, 콘텐츠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·유통 기반 강화

### □ 추진 실적

- (외주제작 생태계 조성)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제작 지원 확대('13년 12억원→ '14년 24억원), 방송사-제작사간 MOU\* 이행점검, 외주제작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회\*\*를 통해 외주제작 환경 개선

\* MOU 내용 : 출연료 지급보증('10.11), 간접광고 수익배분('11.11), 촬영원본 공유('12.2)

\*\* 방통위 상임위원(의장), 방송사·제작사 대표, 학계·법조계 등 25명으로 구성

- (방송콘텐츠 제작역량 제고)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(93개 사업자, 134개 채널) 및 방송대상 시상(출품 398편) 등을 통해 방송제작 역량 및 창작의욕 고취

- (지역별 제작 기반 확충)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(강원·대전·인천 신설)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인력 양성,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·방송

※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·방송(324편), 미디어교육 과정(2.4만명), 장비·시설 대여 이용(12.7만명) : '14.8월말 기준

- (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 관리체계 구축) 프로그램명, 줄거리 등 방송프로그램 기본정보를 표준화하여 유통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(표준화: '14. 4월, 시범서비스: 12월 예정)

### □ 향후 계획

-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외주제작 생태계 개선방안 마련 : '14. 12월
-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: '14. 12월
- 방송사-외주제작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 개정 추진

※ 정부안('12.11월 국회 제출), 박창식 의원 발의안('12.7월) : 미방위 법안소위 계류

## 2-4. 방송통신 규제 개선 및 해외진출 지원 등

### □ 개 요

-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방송채널의 해외 송출을 지원하여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

### □ 추진 실적

- 규제개선 TF 운영 등을 통해 7건의 규제를 '14년 감축대상 규제로 선정('14.6월)하였고, 연말까지 완료 예정
  -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폐지 등 7건
-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전담조직(KISDI, KISA) 마련('14. 9월)
  - '14년 감축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실시(연내 완료 예정)
-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협력 MOU 체결('14. 1월)
  - 방송콘텐츠 교류, 프로그램 공동제작, UHD TV 기술개발 등
- 미국 위성 디렉TV에 '아리랑 TV' 송출 지원('14. 2월)
- 'EBS 교육방송'의 베트남(국영방송 VTV) 진출 지원('14. 7월)
  - 베트남에 '한국형 교육방송 설립' 지원을 위해 베트남 정부부처와 협의
    - ※ '15년 상반기 베트남TV(VTV)가 교육방송 설립 예정

### □ 향후 계획

-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고시 폐지('14.11월)
- 한-중 간 방송분야 활성화 논의를 위한 차관급 라운드테이블 개최('14. 11월)
-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매뉴얼 개발('14. 12월)
- 한-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연계,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등 개최('14. 12월)

### 3.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자 보호

#### 3-1.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' 시행

##### □ 개 요

- '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' (10.1 시행)의 조기 정착을 통해 이통사간 소모적 지원금 지급 경쟁보다는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을 유도

※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(5.28) 및 시행령(9.24) 공포, 4개 고시 제정 및 2개 고시 개정(9.30)

※ 지원금 상한 : 30만원(위원회 의결, 9.24)

##### □ 추진 실적

- (교육·홍보) 제도변경 사항에 대하여 유통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 교육(10.1 現 8,300명 현장교육) 및 교육자료 배포
  - 이용자 대상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단말기 유통법 관련 안내페이지 개설 및 웹툰 게재, 유통점에 리플렛(100만부) 배포
- (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 추진 TF 구성·운영) 방통위, 미래부, 이통사 관계자와 합동으로 법률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\* 상황 점검(9.26~)

\* 이통사 홈페이지에 지원금 공시, 대리점·판매점이 공시내용 및 유통점의 추가적 지원금을 게시·비치 할 수 있도록 준비, 이통사의 판매점 사전승낙 준비

- 이용자 불편 사항 등의 상담·처리를 위해 KAIT에 단통법 관련 '민원상담종합센터'를 설치(9.29)

□ **법률 시행 현황**

- (지원금 공시) 이통3사, 알뜰폰 사업자(15개사)는 200여개 단말기에 대해 최초 공시
  - 최근 출시된 주요 단말기는 10만원 내외로 공시, 출시된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최고 67만원 수준 공시

< 시기별 공시 현황(단위 : 개) >

구분		10.1	10.3	10.8
SKT	공시 추가	116	-	-
	지원금 변경	-	-	114
KT	공시 추가	111	-	24
	지원금 변경	-	-	58
LGU+	공시 추가	35	104	-
	지원금 변경	-	-	3

※ 공시내용은 최소 7일간 유지

- (판매점 사전 승낙) 10.7일까지 47,000여개(이통사 중복 포함) 판매점이 사전 승낙\*
  - \* SKT(16,760건), KT(16,256건), LGU+(13,926건)

□ **향후 계획**

- (이행점검) 지원금 공시·게시여부, 판매점 사전 승낙여부 등을 이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진사항 개선·지도(10.1~)
  - 이용자 불만사항, 유통점 애로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제도 개선 사항 발굴
- (교육·홍보) 유통점 관계자 교육 및 이용자 대상 홍보(계속)



## 3-2.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 강화

### □ 개 요

-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,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

### □ 추진 실적

- (실태점검·처분) 구글이 스트리트 뷰('09. 10~'10. 5) 준비 과정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에 대해 제재 및 시정 명령(1월), 구글의 시정명령 이행여부\* 확인(7월)

\* 구글 본사(미국 캘리포니아)를 방문하여 구글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삭제 이행 과정 확인('14.7.21~7.27)

- 금년 3월 KT 해킹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(981만명), 오픈마켓 판매점, 셀러틀·스마트폰앱 사업자, 통신사 영업점에 대한 행정처분(1~9월)

#### < 2014년도 개인정보 처분 현황 >

대 상	행정처분 내역	비고
구글	· 과징금 2.1억원, 개인정보 삭제 시정명령	'14.1월처분
오픈마켓 판매점	· 19개사 과태료 1.2억원	"
KT 개인정보 유출	· 과징금 7,000만원, 과태료 1,500만원 부과	'14.6월처분
셀러틀·앱 사업자	· 11개사 과태료 0.7억원	'14.5월 처분
통신사 영업점	· 26개사 과태료 1.4억원	'14.9월처분

○ (법령 개정) 개인정보 유출시 보호조치 위반과의 인과관계 입증 없이 과징금 부과(1억원→관련 매출액 3%이하),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('14.11월 시행)

- 과징금 산정기준, 법정 손해배상 청구 기간, 암호화 대상 확대\*, 개인정보유효기간 단축(3년 →1년)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중 (現 규개위 심사중)

\* 비밀번호, 주민번호 외에 운전면허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까지 추가

## □ 향후 계획

○ (실태점검·처분) 대량문자 발송사업자, 쇼핑몰, 게임사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제재 방향 위원회 상정 예정('14.하반기)

○ (온라인 개인정보 취급가이드라인 마련)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,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 마련('14.하반기)

### 3-3.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

#### □ 개 요

- 악플 등 사이버 폭력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피해구제간 균형 도모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

#### □ 추진 실적

- (교육·캠페인)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등 인터넷 윤리 교육(9월 73,000여명) 및 교육 콘텐츠 개발·보급
  - 「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」 등 민·관협력 공동 캠페인\* 개최(6월)
- \* 선플달기 거리 캠페인, 인터넷윤리관련 기획기사 게재, 인터넷윤리 공익 광고 등
- (법령 개정) 임시조치 개선, 명예훼손 분쟁조정 강화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중('14.2 입법예고, 現 법제처 심사중)

#### <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(임시조치 개선) 피해자 뿐만 아니라 게시자의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포털 등의 임시조치에 대해 게재자 이의제기권 신설
- (명예훼손 분쟁조정 활성화)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 기구 및 조정 효력 확대·강화 및 조정 기간 단축
- (업계 자율심의 강화) 업계 자율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의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도 사업자 배상책임을 감면

#### □ 향후 계획

- 인터넷 윤리교육(계속)
- 정보통신망법 개정(안) 국회제출('14.하반기)

### 3-4.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지원

#### □ 개 요

- 장애인용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, 수신기 보급 등을 통하여 시·청각 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

#### □ 추진 실적

- **(장애인방송 확대)** 장애인방송(자막·화면해설·수화 방송)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대상사업자(전년도 153개사→156개사) 및 편성비율 확대  
※ 예) 보도·종편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: 자막('13년 30%→50%), 화면해설('13년 4%→6%), 수화통역('13년 2%→3%)
- **(제작비 지원)**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('13년 37억원→'14년 40.7억원)  
- '14년도는 재정상황이 어려운 지역지상파, 개별 SO 및 개별 PP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 ('13년 미방위 지적사항 반영)  
※ 지원 비율('13년→'14년) : 지역지상파(25%→37%), 개별SO·PP(50%→55%)
- **(수신기 보급)** 수신기 보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(방송법 개정 : '14. 5월)하고, 시·청각 장애인용 수신기를 보급 중(12,200대)  
※ 수신기 누적보급률 : '13년 약 21% (112,500대) → '14년 22% (124,700대)
- **(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)** EBS 방송프로그램 중 25편을 선정, 자막·음성해설 프로그램으로 제작·보급 (12월, 예산 2억원)

#### □ 향후 계획

-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방송수신기 보급 : '14. 12월
-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제작·보급 : '14. 12월

### Ⅲ. 주요 현안과제

#### 1. 재난방송 제도 개선

##### □ 개요

- '세월호 참사'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##### □ 주요 내용

- (재난방송 관련 법령 정비) 재난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의 실시요건과 방송사 범위 조정 등 관련 법령\*을 정비

\*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, 방송법 및 시행령,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

- (방송평가 강화) 방송평가시 재난방송 배점 상향 및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사항 감점 강화를 통해, 향후 재허가·재승인시 평가결과 반영

※ 現 재난방송 배점 : 지상파 60점 (총 1,000점), 종편 65점 (총 700점), 보도 70점 (총 500점)

※ 現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감점 : 주의 -1점, 경고 -2점, 징계 -4점, 시정명령 -8점

- (재난방송 준칙) 재난발생 시 방송사들이 지켜야 할 「재난보도 준칙」 중에서 핵심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, 기자·PD 등 관계자들이 재난방송 준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실시

※ '14. 9. 16일 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제정한 '재난보도 준칙'을 반영할 예정

- (중앙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) 同 협의회의 핵심이 지상파 방송, 종편·보도PP인 점을 고려하여, 중앙재난방송협의회 관련 체계 개선 추진

※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: 미래부 및 안행부 협의

- (기타) ①DMB 등 중계설비 구축 지원 ('15년 9.1억원), ②스마트 기기를 통한 재난정보 제공 방안 강구 (포털사 협의), ③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연계 기관 확대 추진 (기존 소방방재청, 기상청에 원자력안전위원회, 한강홍수통제소 추가)

##### □ 향후 계획

-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 마련 : '14. 10월말
-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중계설비 구축 : '15년 ~

## 2.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파기 제도 시행

### □ 개 요

○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'12. 8. 18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신규 수집·이용 금지, '14. 8. 17까지 既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 필요

○ 오프라인의 경우,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'14. 8. 7부터 신규 수집 금지

※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 허용

### □ 주요 내용

○ (교육·홍보) 개인정보보호협회·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회원사에 주민번호 파기 홍보, 컨설팅·설명회 개최(연중)

○ (기술지원·실태점검) 중소·영세 사이트에 대한 파기 기술을 지원 ('14년 9,000개)

- 아울러, 131개 대형 사업자(일방문자 10만명 이상) 위주로 우선적으로 실태 점검중(9월~)

○ (주민번호 수집예외 규정) 방송·통신사업자의 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('14.8월)

### □ 향후 계획

○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지 않은 업무\*에 대해 방송통신사업자, 관련협회 등과 대책반을 구성·운영('14.7~)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 마련('14. 12월)

\* 신용조회, 채권추심, 자동이체 계좌확인, 번호이동 요금 정산 등

## IV. 참고자료

### 1 국회 통과필요·계류 법안 현황

#### □ 통과필요 법안 현황

- (위치정보법, 정부안)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허가·신고 면제 등 규제 완화
  - 또한, 긴급구조기관이 구조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가족 관계 등록전산정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('13.12.27제출)
- (방송법, 정부안) 외주제작사에 대하여 간접광고 판매 허용, 방송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 등 외주제도 개선
  - 또한, 보편적 시청권 정의에 '추가비용 부담 없이'를 추가하여, 기존 시청수단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규정 등('12.11.30제출)
- (방송법, 최재천의원 발의안) 지상파방송사에 수신환경 개선계획 제출의무 부과, 재허가 심사사항에 수신 장애 해소노력 추가 등 지상파방송 수신환경 개선('13.12.19발의)

#### □ 계류법안 현황

(2014.9.30.기준)

구 분	국회 심사단계			계
	미방위	법사위	본회의	
정부 제출안	4	0	0	4
의원 발의안	109	1	0	110
계	113	1	0	114

※ 방송법(30), 정보통신망법(28), 방통위설치법(15), 전기통신사업법(4), 방송문화진흥회법(7), 한국교육방송공사법(7), 방송통신발전기본법(6), 위치정보법(5), 방송광고판매대행법(2) 등

## ② 2014년도 세입·세출예산 개요

### 1. '14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 수입계획

◇ ('13년) 12,042억원 → ('14년) 11,213억원 (△829억원, '13년 대비 △6.9%)

- (일반회계) '14년도 428억원, '13년도 대비 112억원(35.4%) 증가
  - 전기통신사업법, 방송법 등에 의한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등 증가(265→418억원, +153억원)
  - 정부 출연금에 대한 전년도 사업비 정산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감소(51→10억원, △41억원)

- (방통기금) '14년도 10,785억원, '13년도 대비 941억원(△8.0%) 감소
  - 주파수할당대가 및 방송사분담금 등 법정분담금 감소(△1,477)
  - 디지털전환용자 대여원금 및 금융기관 예치 이자수입 등 감소(△52)
  - 공자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 증가(+211)
  -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등 여유자금 회수 증가(+377)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미래부 공동관리

#### < '14년도 세입 세부 현황 >

< 단위 : 억원 >

세 입 과 목	'13년 예산(A)	'14년 예산(B)	증 감	
			B-A=C	C/A*100
<b>합 계</b>	<b>12,042</b>	<b>11,213</b>	<b>△ 829</b>	<b>△ 6.9</b>
□ 일반회계	316	428	112	35.4
○ 벌금 및 과태료	265	418	153	57.7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 및 이자반납 등)	51	10	△41	△80.4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11,726	10,785	△941	△8.0
○ 자체 수입(방송사 분담금, 주파수 할당대가 등)	8,255	6,726	△1,529	△18.5
○ 정부 내부 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47	258	211	448.9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3,424	3,801	377	11.0



## 2. '14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계획

◇ ('13년) 2,036억원 → ('14년) 1,963억원 ('13년대비 △73억원, △3.6%)

○ 총 지출규모는 1,963억원(일반회계 507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456억원)으로 '13년(2,036억원)대비 73억원 감소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3년 (A)	'14년 (B)	증 감 (B-A)	%	
총 지출 <I+II> (총계 <sup>1)</sup> =일반회계+기금총계)		2,036 (12,241)	1,963 (11,292)	△ 73 (△949)	△3.6 (△7.8)	
재 원 별	I. 일반회계	515	507	△ 8	△ 1.6	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 (기금총계=지출+내부거래+여유자금)	1,521 (11,726)	1,456 (10,785)	△ 65 (△ 941)	△ 4.3 (△ 8.0)	
		소계(㉠+㉡)	5,412	5,908	496	9.2
	① 지출	㉠ 방송통신위원회	1,521	1,456	△ 65	△ 4.3
		㉡ 미래창조과학부	3,891	4,452	561	14.4
	② 내부거래(공자기금예탁)	1,000	2,400	1,400	140.0	
	③ 보전지출(기금 여유자금운용)	5,314	2,477	△2,837	△53.4	
분 야 별	□ 통신 분야	535	533	△ 2	△ 0.4	
	□ 방송분야(문화 및 관광)	1,501	1,430	△ 71	△ 4.7	
기 능 별	□ 인건비	151	146	△ 5	△ 3.3	
	□ 기본경비	39	41	2	5.1	
	□ 주요사업비	1,846	1,776	△ 70	△ 3.8	
	① 방송 인프라 개선 및 미디어다양성증진	938	880	△ 58	△ 6.2	
	② 공정경쟁 및 안전한정보이용환경조성	161	201	40	24.8	
	③ 방송기반 구축 및 시청자권익 증진	675	649	△ 26	△ 3.9	
	④ 방송통신 운영지원	72	46	△ 26	△ 36.1	

1) 방송통신위원회의 총계(11,292억원)는 일반회계 지출규모(507억원)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지출(방통위 1,456억원+미래부 4,452억원), 내부거래(2,400억원), 여유자금(2,477억원) 등을 포함한 금액